

12.5.12 지방직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기출문제(A형) 해설

1. 총평

- (1) 행정법 총론의 전 분야에서 골고루 잘 엄선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 (2) 어느 특정 분야에 특별히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제자가 고심했음을 느낄 수 있다.
- (3) 난이도 측면에서 9급 문제의 정형이라 할 수 있다.
- (4) 지문의 장단 : 1분에 한 문제를 모두 읽어보고 정답을 고르기에는 지문이 긴 문제가 다수 보인다. 이것은 시험장에서 숙고하고 판단하여 정답을 고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수험생에게 기계적으로 정답을 골라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문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노력이 출제자에게 더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 (5) 합격권에 이르기 위해서는 95점 정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6) 정답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7)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는 많지 않았다. 2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문제라 할 수 있다.

2. 출제경향 및 단위별 출제 분포도

(1) 단위별 분포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3문제	8문제	3문제	6문제

(2) 분야별 분포

판례	법령	법령이나 판례와 관련 없는 순수한 이론적 문제
13	6	1

※ 다만, 과거의 문제는 이론과 판례에 관한 문제로 준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근 3~4년 전 부터는 판례가 수 없이 집적되었고 또 많은 판례들이 이론에 흡수되어 특별히 판례문제와 이론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

3. 앞으로의 대책

(1) 이론과 판례를 병행

이론과 판례를 병행하여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론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그 이론에 해당하는 대표적 판례 2~3개 정도를 병행·학습하여 기본적 사항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령 주요규정의 명확한 이해

법학은 실정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법령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법학공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기본이 된다.

※ 정답 및 해설

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②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조약이라고 판시하였다.
- ③ 대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②

[해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조약이 아니며 조약에 준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9.7.23, 98두14525).

2. 행정법 및 행정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행정법의 경우에는 과실행위를 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법률 규정 중에 과실 행위를 벌한다는 명백한 취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행정법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의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아울러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 ③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처벌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④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처벌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대위책임이나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자기의 감독불충분에 대해서 지는 자기책임·과실책임이다.

3.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공무원에는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가 포함되지만,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이 적용된다.
- ③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비추어 조리상 인정될 수 있다.
- ④ 법령 위반에는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된다.

[정답] ①

[해설]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 ④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③

[해설] ③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5.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 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 ③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 ④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정답] ①

[해설]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6.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 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④

[해설]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9.9.24. 2009두2825).

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 ③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정답] ②

[해설]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지만 국가배상은 인정된다.

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없다.
- ②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③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는 당연무효인 행위이다.
- ④ 권한 있는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9.9.17. 2007다2428 전원합의체). ② 옳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의하여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청구인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의 수용이 법률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흠결하여 당해소송은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헌재 2002.05.30. 2000헌바58, 2001헌바3(병합) 전원재판부). ③ 틀림.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0.1.23. 87누947). ④ 틀림. 고시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판례> (구)도시계획법 제7조가 도시계획결정 등 처분의 고시를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결정 등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건설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등 지방장관이 기안,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1985.12.10. 85누186).

9. 행정처분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행정처분의 송달은 민법상 도달주의가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한 발신주의를 취한다.
-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③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우편물이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민사상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의 송달도 원칙적으로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에 의한다. <법령>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산림형질변경허가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 ③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는 기속행위로 본다.
- ④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판례>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정한 귀화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대판 2010.7.15. 2009두19069).

1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 처분 또는 재결을 받은 상대방 이외의 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형성소송설에 따를 경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행정청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 ④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처분 또는 재결을 받은 상대방 이외의 자(제3자)에게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틀림.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니라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 ④ 틀림. 재량행위도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2. 부당이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조세과오납
- ② 공무원의 봉급과액수령
- ③ 처분이 무효 또는 소급 취소된 경우의 무자격자의 기초생활 보장금의 수령
- ④ 자연재해시 빈 상점의 물건의 처분

[정답] ④

[해설] ④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사무관리에 해당한다.

1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행정대집행상 1차 계고처분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제3차 계고처분
- ②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
- ③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 ④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정답] ③

[해설] ①②④에 대해서는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였고 ③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공공기관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가 있다.

15. 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 ② 행정계획이란 행정활동의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판례는 단수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급부행정유보설은 침해적 행정 및 급부행정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16. 사정판결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
- ②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③ 사정판결의 경우 처분 등의 위법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사정판결의 경우이든 사정판결이 아닌 판결의 경우이든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7.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과태료의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답] ③

[해설] 과태료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써가 아니라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그리고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1항).

18.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 ②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④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4호).

19.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지만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이유제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제시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도 적용된다.
- ④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면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하자의 치유 시한에 대한 판례의 대체적 태도는 ‘행정쟁송제기 이전까지’이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소송 계속중에 행해진 피고쪽의 행위에 의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4.4.10, 83누393).

20.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상반기지방직9급

- ① 수익적 행정행위에 철회원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철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유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국유임야대부·매각행위 및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부과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전제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히무효이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나 철회는 상대방의 기득권 및 신뢰의 보호, 법적 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즉,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할 때에는 비록 취소·철회할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철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철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정청이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옳음. 국유임야대부·매각행위 및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부과는 사법관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취소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 ③ 틀림.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다툼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④ 틀림. 청문절차의 결여는 일반적으로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이다.